멍드는 퇴직연금

중 · 장기 노후대책 찾아보기 어려워

※편집자 주(註)=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후 몸집이 급격하게 불었으나 단기 계약, 보장금리 격차, 계열사 몰아주기, 전환기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퇴직연금이 중 · 장기 노후대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장기플랜에 '단기계약' 75%

퇴직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급성장하면서 가입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퇴직연금시장에선 '중 · 장기 노후대책'은 찾기 어렵고 '단기 열풍'만 거세게 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0조 원이 목전인 29조1천472억 원으로 전년 말의 14조248억 원에 비해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적립금은 2008년 11월 5조 원, 2009년 11월 10조 원, 지난해 10월 20조 원을 각각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다. 작년 말 현재 가입 근로자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 874만854명의 27.4%인 239만3천934명이다. 퇴직연금 도입 이래 처음으로 작년 12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가입액 27조2천349억 원 중 운용기간 5년 이상은 1조540억 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상품은 안전성 위주로 운용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손익을 나눠 주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원리금 보장 상품은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3~4년짜리 1조8천924억 원(6.9%), 1년 초과~3년 미만 9천221억 원(3.4%) 등으로 운용기간이 1년 넘는 상품을 모두 합쳐도 14.2%에 지나지 않는다. 운용기간 1년이 18조8천892억 원(69.4%)이고 1년 미만은 1조6천643억 원(6.1%)이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4분의 3은 1년 이하 단기 상품이란 얘기다.

단기 위주의 계약은 퇴직연금 자산의 안전한 운용 관리라는 측면에서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하는 데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단기 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등의 인식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작년에 효력이 종료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시절 1년 계약이 관행화됐고 1년 단위의 결산도 영향이 있다. 가입하는 기업이나 연금사업자 모두 장기 운용 때의 회계 처리나 위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단기 계약 확산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나 주가 등 자산 운용의 기본 환경은 어차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도 높고 안정적이다.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계기로 퇴직부채 관리 차원에서 점차 장기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 상품 중 수익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하는 사업주들이 연금사업자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단기 계약을 선호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금융사의 퇴직연금사업 부문 간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DB형에 가입하는 기업 사업주들은 해마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고자 단기 계약을 선호한다. 보장금리가 높아도 근로자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업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과열경쟁 속 혜택 '양극화'

퇴직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높은 금리를 보장받는 퇴직연금 상품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0조 원이 목전인 29조1천472억 원으로 전년 말의 14조248억 원에 비해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사진_ **안정원** 기자

에 들 수 있지만 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 금융회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장받은 금리는 4.8%대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에 가입한 대기업 사업장의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는 5.0% 안팎이다. 평균 보장금리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가 0.3% 포인트 가량으로 파악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지난해까지 계속된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정도의 금리차가 발생했지만 기준금리가 올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2009년 7월과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 1월에 0.25% 포인트씩 인상해 2.75%까지 끌어올렸다. 시중금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금리 격차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실감을 느낀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려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연금사업자들이 대기업 사업장 가입을 유치하면서 보장 금리 우대에 콘도이용권이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대기업에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무분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면서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시장에서 대기업 유치용 '끼워 팔기'도 성행한다. 금융 당국이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경고하고 나섰지만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판단에 금융회사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4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은 최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다. 12월 한 달 동안 117건 가입에 적립금은 1천500만 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특별이익을 챙기기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는커녕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퇴직연금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금리 보장과 특별이익 제공 등을 근절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법적 근거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당국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묶어서 '연합형'이나 '종합형'으로 가입하게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계열사 챙기기 극성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여생을 의지할 가장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다. 따라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자산 운용 능력이나 수수료, 서비스와 상품의 내용 등 객관적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은 퇴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관점에서 결정되기보다는 계열 관계 등에 좌우되는 것이 허다하다.

퇴직연금시장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나눠 먹기' 구도로 흘러가면서 가입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의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적립 규모는 1조2천608억 원으로 증권업계 1위, 전체 퇴직연금업계 8위다. 2009년 말 증권업계 최하위에 머물던 HMC투자증권이 불과 1년 만에 수직 상승한 것은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퇴직연금을 따냈기 때문이다.

1분기에 예정된 약 1조 원 규모의 기아차 퇴직연금까지 유치하면 HMC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적립 규모는 단숨에 2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삼성생명(4조5천340억 원), 국민은행(2조8천383억 원), 신한은행(2조6천569억 원), 우리은행(2조3천880억 원)에 이어 업계 5위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모기업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물량을 몰아준 덕분에 하이투자증권은 단숨에 증권업계 3위로 뛰어올랐다.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제 식구 몰아주기'는 일반화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이 삼성생명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어 삼성생명, 삼성SDI, 제일모직 등은 삼성화재에 퇴직연금을 맡겼다. 롯데그룹(롯데손해보험), 한화그룹(한화손해보험), 동부그룹(동부생명, 동부화재), 현대그룹(현대증권) 등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챙기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윈-윈(win-win)'처럼 보일 수 있지만 퇴직연금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 계열사를 두지 않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퇴직연금사업을 접거나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그만큼 선택의 기회를 잃는 셈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연을 관람 중인 직장인들.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지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안전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진_ **이상학** 기자

토러스투자증권 원재웅 애널리스트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사들은 현대차 눈치를 보느라 다른 증권사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계열사 밀어주기를 내버려 둔다면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시장이 기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계열사에만 위탁해 놓았다가 해당 그룹이 갑작스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원활한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퇴직연금 선진국 일본은 계열관계가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 선임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서에는 '운용관리기관 비교표'를 통해 선정 사유를 요약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활용되는 운용관리기관 선임 이유서를 도입하고 기업주와 사업자보다는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손 실장은 제안했다.

전환기 퇴직금 허점 수두룩

퇴직금제도가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으나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지 않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는 데에는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다. 퇴직연금 전환이 늦어지는 기업의 퇴직금 적립금이 장부상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데다 기업이 갑자기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등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종료되면서 기업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회사 밖에 쌓지 않고 사내에만 적립하게 된다. 사내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도 지난해 기준 30%에서 해마다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6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에 쌓은 기업은 세금 혜택을 보는 손비인정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세제를 이처럼 개편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낡은 퇴직금 제도를 새 제도인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으로 서둘러 전환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지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안전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들은 퇴직급여충당금 사내 적립을 장부상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 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쓸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갑자기 문을 닫을 때에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난해 말 현재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5.7%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이런 불안감은 대다수 근로자의 몫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금제도 도입 대상에 포함된 4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비해 도산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실제 적립하는 대신 장부상으로만 관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효력을 지난해 말로 종료시킨 것

단기 위주의 계약은 퇴직연금 자산의 안전한 운용 관리라는 측면에서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하는 데 취약하다. 노동부가 퇴직연금의 효용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마술 퍼포먼스. 사진_ **김주성** 기자

퇴직연금시장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나눠 먹기' 구도로 흘러가면서 가입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제공_ **삼성화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비해 도산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실제 적립하는 대신 장부상으로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_ **연합DB**

저출산 ·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전할 수 있고 개인연금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_ **이해용** 기자

자체가 정부 정책의 '전략 실패'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사외적립을 하기 전에는 사내 적립분에 대한 퇴직금 수급 보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퇴직금 수급권 보장 문제는 제도보다 사업주의 의지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기존의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적립금 잔액은 기업이 마음대로 빼낼 수 없고 근로자의 퇴직 때 일시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전환 때에만 돌려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퇴직계좌(IRA)를 옮길 때의 과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은 다른 금융사로 바꾸더라도 과세이연이 유지되지만 IRA에는 특례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IR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면 계좌를 해약해 퇴직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체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사업을 기존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데 악용하는 예도 있다. 반면 직장을 옮기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세 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시행시기가 문제다. 퇴직연금사업 증권사의 한 임원은 "IRA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조속히 과세이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연말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가입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장통' 해소 대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선진국형 연금'의 3층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축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5년을 넘으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전할 수 있고 개인연금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단기 계약 횡행, 보장금리 격차, 계열사 몰아주기, 전환기 수급권 보장 미흡 등이 대표적인 퇴직연금의 문제점이다. 퇴직연금이 커지면 자본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근로자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육성 방법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

역을 맡았던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퇴직연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후세대에 조세 부담으로 남는다"며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널뛰기 장세를 없애려면 퇴직연금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이 근시안적인 실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눈앞의 이익만 좇으면서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로 구성된 '퇴직연금발전협의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 주택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조세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사업장 퇴직연금 보장금리가 과다하게 설정돼 있다"며 중소기업과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된 몇 개의 대규모 기금형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IRA도 수익률을 시장에 맡겨 놓은 것이라 리스크가 크다.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근로자가 은퇴를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계열 금융회사 '몰아주기'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대형 은행 퇴직연금사업 담당 간부는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심각하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것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특정 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적으로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든 계열사 물량 비중이 특정 비율을 넘지 않게 분산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는 점, DB형과 DC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하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박홍민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한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이 많아 저마다 적용하는 변수가 다르고 답도 다르다. 운용관리기관을 하나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쌓아야 할 적립금 수준을 결정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마다 수치가 다 다르다. 이걸 평균해 버리면 회사와 무관한 수치가 나온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을 빚지 않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또 "운용관리기관은 자산을 분산투자해야 하는데 자기 상품에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리스크도 있지만 가입자로서는 투자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반영해 제도의 틀을 바꾸는 법 개정 작업은 국회의 외면으로 표류 중이다. 사진_ **김현태** 기자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반영해 제도의 틀을 바꾸는 법 개정 작업은 국회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2008년 11월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신규 사업장 설립 1년 이내 퇴직연금 자동 가입 ▲DB형과 DC형 상품의 동시 가입 가능 ▲영세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DC형 표준화 상품 공동 가입 등이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연금사업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여야 대립과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정착과 복수노조 허용 등 현안에 밀리고 있다.

한승호 증권부 기자 hsh@yna.co.kr
신창용 증권부 기자 changyong@yna.co.kr